

강행이나 연기냐...민주 지도부 언론중재법 처리 고심

원내대표 회동 입장차만 확인

오늘 본회의 전 다시 논의키로

커지는 신중론에 상정 힘들 듯

국민의힘 여론전·법적대응 집중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0일 국회 본회의 의를 앞두고 정치권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후 이같이 밝히고 국회 본회의 개의 전인 30일 오후 4시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4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5시로 순연됐다. 여야는 언론중재법의 상정 여부도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0일 양당 의원총회 후 오후 4시에 다시 회동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해 말했지만, 양당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논의되는 것은 언론중재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여당이 추진해온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언론단체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내일 언론법이 상정된다면 어렵지 않을까 한다"며 "내일 오후 4시 이후에 최종적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다면 언론중재법 처리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본회의 처리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는 '8월 처리'를 고수하는 강경파도 적지 않아 강행 처리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원내 관계자는 "지도부가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은 맞지만 당장 '8월 처리' 기조에서 후퇴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본회의 당일 최고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고심이 깊다.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대응 카드가 많지 않아서다. 원내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강행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임시방편'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필리버스터 카드로 '30일 본회의의 표결'을 저지하더라도, 국회 법상 9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상정되면 더 이상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반대 여론이 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며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위헌심판 청구를 비롯해 법적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의원은 "언론중재법안의 '고의 중과실 추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면 위헌 결정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법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이 되며, 표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8월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간 만큼 정국 파행과 여론의 역풍 등을 감안해 법안 상정 자체를 미루고 냉각기를 갖자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숙의와 논의의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면서 "야당의 약속을 받고 9월이나, 안되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기선 제압”...민주 대선주자들 첫 경선지 충청권 공략 집중

이재명, 대덕연구특구 공약 발표

이낙연, 3박 4일 충청 일정 돌입

정세균·김두관 온라인 지지 호소

청년·직능단체 지지선언 줄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후보가 지역 순회 경선 돌입 전 마지막 주말인 28~29일, 첫 경선지인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을 누비며 총력을 기울였다.

10월 초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민주당은 오는 31일 대전·충남 경선 투표 개시를 시작으로, 순회 경선 일정을 시작한다.

이 지사는 특히 충청권 지역 공약을 쏟아내며 대세론 굳히기를 시도했다.

이 지사는 29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대덕 특구를 세계적 융합연구와 창의적 인재 허브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기술창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국가 디지털 대전환과 산학연 네트워크 거점, 과학문화 기반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정부 공모 모든 사업에 수도권 배제를 묻는 말에 '수도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방이 해야 할 일도 있고, 경쟁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봉쇄는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 지방에 가산점이나 우선권을 제공해 배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대선에서 제안한 기획사업인 케이(K)-바이오랩 허브를 공모로 돌린 뒤 인천에 준 것은 대전이 섭섭할 만하다"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앙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충청 일대를 순회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국회의사당이 아닌 지방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상당히 괜찮다"며 "아이디어로 고민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은 청주시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청주 도심 통과 노선 확정과 조기 구축을 약속하며 "충청의 사위 이재명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 국토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역전을 노리는 이낙연 후보는 이날 대전 국립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충청 일정에 들어가며 충청권 바닥 민심 출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앞서 충남과 충북지역의 지방의원들의 지지선언을 이끌어 낸 이 후보 측은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세종의사당 부지와 로컬푸드 매장인 심상장터 도담점, 세종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지지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후보는 시장 상인과 만나 "모두 신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긴 고동의 세월을 견디고 계시는데, 더 힘든 것은 이 고동이 언제 끝날지 확실치 않지 않냐"며 "방역"을 빨리 안정시키고 거리두기를 어떻게든 완화해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빨리 누그러뜨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은 대

한국 중심이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금강의 기적을 이룰 때가 됐다"며 "금강의 기적을 통해 충청도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중심 역할을 다하면서 전국 균형발전 견인차 구실을 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발주자들도 충청권을 판세 뒤집기의 기회로 보고 공을 들이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는 30일 충남 천안과 아산, 대전을 차례로 찾아가고, 박용근 의원은 오는 31일 대전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라 자기격리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은 당분간 온라인을 통해 충청권 당원들과 접촉,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이낙연 경선 후보 진영의 지지선언이 이어지는 등 본격적인 경선에 앞서 지지세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영호남 청년 400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영호남 청년 4000명은 29일 경남 하동 화개보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각 직능단체들과 정책연대를 이어가면서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자영업 총연합회와 중소기업연합,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개인택시사업 연합회 등 1200여개 중소기업과 자영업 직능단체연합은 29일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추석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추구 결의

국회 농해수위 여야 합의

10만원→20만원, 정부에 요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추석 명절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상향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농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추석 명절 동안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결의안에 담겼다.

정·탁금지법은 농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동안 해당 금액을 20만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9월 21일)을 앞두고 공공부문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상향액을 10만원으로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국회 농해수위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선물 가액 상향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개호 농해수위위원장(당양·함평·영광·장성)은 "농어촌의 사정은 결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비해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라며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것은 우리 농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과일의 경우 1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명절에 소비되고, 축산물도 도축량이 명절엔 평년 대비 75% 증가한다. 명절에 농수축산물 대부분이 소비된다는 의미"라며 권익위가 농어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전형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MG광남새마을금고

창립 44주년 기념

예금 특판

MG뛰어라정기적금 1년 **4.0%**(조건부)

MG NEW 정기적금 1년 **2.6%**(조건부)

상상모바일정기예금 1년 **2.1%**(조건부)

대출 상담 환영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정책자금(햇살론)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

상담 환영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생 애드밴스

건설경제조합
월산사거리
대성사거리
전현숙 국밥
광산동본점

광주시 남구 독립로 161 (월산동)
Tel. (062) 366-8111

통고개역 지점

KT시광주지사
무등사에 연구원
통고개역 지점
동신대한방병원

양동초등학교
농성 빛어울림 아파트
월산동 명품 반도유보아 아파트

광주시 남구 월산로151번길 2 (월산동) <통고개역 2번출구>
Tel. (062) 366-8112